북한은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수근 /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통일문화연구소장

한반도 정세는 미국에 조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형성된 유동성을 여전히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한 안보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2003년초 새로 들어서는 한국 정부와 대북 정책을 조율한 후 북미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관측이 워싱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금년에 있을지도 모를 북미 대화나 접촉도 지극히 형식적이 될 것이라는 말과 같다.

부시 행정부 출범으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이렇게 되면 미국은 연초 북한을 ‘ 악의 축 ’의 일원으로 포함시켰던 연장선상에서 북한을 자극할 고위 지도자들의 발언이나 정책을 지속시킬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이나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은 최근 이 기조에서‘ 북한 때리기 ’를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1 년간 미국이 이런 식으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갈 경우, 북한은 물론 우리 정부도 매우 거북한 입장에 처할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불안한 유동성과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한반도 안보의 안정적 관리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선 남북한 및 미국이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3자의 입장과 이해가 서로 다르고 3자간에 걸린 현안이 엄중해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유동적 불안정성이 그런 대로 관리만 된다면 그래도 우리 경제나 사회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 관계가 의외의 돌출 변수로 요동이라도 치는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에 악영향을 다방면으로 미칠 것이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향후 어떻게 진전될 것이냐는 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강도(强度)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이 현 수준보다 온건한 입장으로 후퇴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지금의 입장을 유지할 경우는 그래도 남북 관계에서는 일정한 ‘ 주고받기식의 거래 ’를 통한 소강 국면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경우 남북 관계에도 바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의 강경한 되받아치기가 예견되고 한국은 북미 사이에 끼어 심한 속앓이를 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대북 공조 재확인

우리에게 그나마 다행한 것은 부시 대통령의 방한 결과 한미 양국이 대북 공조 정책을 현상 유지 상태로 봉합한 것이라 하겠다. 미국도 북한을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강수를 고려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우리도 북미 관계의 진전 속도에 맞춰 대북 정책을 펴야 한다는 한계가 설정되었다고 보여진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거듭 표명하는 배경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한반도 정세의 키를 쥔 쪽은 북한이라 하겠다.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대남 및 대미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서울 방문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오리라는 것은 예상됐던 일이다. 북한 외무성은 부시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그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현재 북한에선 이 기조가 반복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했다. 하지만 그는 폐쇄적이면서 주민을 굶기는 북한 정권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가 없고 굶주림에 처한 북한 국민을 위해 대화 여부와 상관없이 식량 지원을 다짐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와 주민을 분리 · 대응하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의 자세에는 미국이 북한의 ‘ 체제 변경 ’을 겨냥한다고 북한으로서는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분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다. 북한이 “ 우리 제도의 변경에 대해 운운하고...(중략) 최고 수뇌부와 인민 대중을 갈라놓아 보려는 제(부시) 나름의 타산 ”이라고 반박한 배경이다. 북한이 미국에 이런 의혹을 갖고 있고, 미국도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다. 북미간 대화가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남북 당국간 대화 국면 조성이 미국의 대북 인식 교정에도 기여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부시 대통령을 격하게 비난하면서도 우리 당국을 비난하지 않았다. 북한이 또 금강산 해돋이 남북공동행사를 무산시킨 책임을 주로 미국에 돌리면서 우리 당국을 정면으로 비난하는 일은 삼갔다. 이런 일련의 자세가 남북 당국간 교착국면의 타개를 염두에 둔 북한의 의중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그러나 북한의 그런 자세는 유의해볼 대목이다. 북미간 긴장 상태의 지속이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에는 북한도 큰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곧 춘궁기의 본격화와 함께 농사철을 맞이한다. 남한으로부터 식량 및 비료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4월말부터 2 개월간 외래 관광객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 아리랑 공연 ’이 성공하려면 남쪽 당국의 협조가 불가피한 정황이다. 북한이 미국과는 신경전을 펴더라도 남북 당국간 대화 국면을 열어야 할 요인이다. 인민들을 덜 굶기면서 미국의 대북 인식을 고칠 수 있는 방안도 남북 대화 국면의 조성뿐이다.

북측은 대화 재개를 위해 약속 이행을

그럼에도 북한이 대남 대화 국면을 열지 못하는 최대 요인은 체제의 경직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부시 행정부와의 대미 관계를 최종 설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한동안 더 관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에 따라 대남 정책도 새롭게 짜여질 공산이 크다. 그렇지만 북한이 대미 관계의 설정과는 별도로 대남 관계를 단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의 대내적 급박한 수요 때문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자세 변화를 기대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가 최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도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당초 3월이 되면 각종 대북 제의를 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3월에 들어서자 북한에 대해 간접화법으로 대화 분위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북한이 비료 지원을 요청한다면 비료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정세현 통일부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발언은 북한에 대해 우리 쪽에 비료 지원을 요청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물론 북한의 요청이 없더라도 정부는 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료의 경우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먼저 움직이라는 뜻이자 정부가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함축성도 느껴진다.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한은 대화 국면의 재개와 함께, 특히 부시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이산가족 상봉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남쪽의 ‘ 퍼주기 ’ 논란과 부시 대통령의 대북관을 다같이 묽게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